

트럼프, '반무기화 기금' 옹호..."내 합의금 포기하고 정의 실현"

등록 2026.05.23 00:00:27 | 수정 2026.05.23 05:28:25



[워싱턴=AP/뉴스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5.22.

[워싱턴=뉴스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임 정권에서 정치적 이유로 수사나 처벌을 받은 이들에 대한 배상 기금 설치를 추진해 논란이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정의 실현이라며 옹호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나는 최근 발표된 '반무기화 기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엄청난 돈을 포기했다"며 "나의 세금 신고서를 불법 공개한 사건과 마러라고에 대한 불법적 침입 등에서 엄청난 금액을 받고 합의할 수도 있었다"고 적었다.

이어 "그러나 나는 대신에 사악하고 부패하며 (법무부를)무기화한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이들이 마침내 정의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고 주장했다.

반무기화 기금이란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가 과거 정권에서의 부당 수사 피해자 등을 지원하겠다고 준비 중인 17억7600만 달러(약 2조7000억원) 규모를 자금을 뜻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정권이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법무부를 무기화했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국세청(IRS) 계약업체 직원 찰스 리틀존이 자신의 세금자료를 언론에 제보한 것과 관련해 100억달러 규모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근 합의 철회했다. 합의에 따라 법무부는 반무기화 기금을 조성하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보유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사실상 제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 반무기화 기금이 알려진 지난 18일에는 "거의 알지 못한다. 그것을 만드는데 관여하지 않았다"며 발을 뺐으나, 이날은 입장을 바꿔 공개적으로 지지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정부가 사실상 기금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에 금전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에 JD 밴스 부통령 등 행정부 고위인사들은 이번 기금이 전임 정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과거 모든 피해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한 것임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법무부 기금 추진은 민주당이 극렬히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상당수가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당초 상원 공화당은 이번주 향후 3년간 이민 단속 예산을 미리 편성하는 700억 달러(약 106조원) 규모의 패키지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법무부 기금 사태가 불거져 계획이 불발됐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전날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직접 만나 기금에 대해 설명했다, 여전히 상당수 의원은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